개방형 이사제 등 외부 감시장치 강화 시급

〈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

광주·전남 125곳 2236명 생활
1곳당 연간 10억 보조금 받고도
아동학대·인권유린 감시 '사각'

시설 종사자들 의식개선 교육
'삼진 아웃제' 징계 수위 높이고
소규모 '그룹홈' 전환 검토해야

차영희

이용교

양정숙

안정선

광주·전남에는 총 125개 시설에서 2236명의 보호대상아동(고아)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포함)에서 총 3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사건에도, 부모나 보호자 조차 없는 고아를 양육하는 이른바 '고아원' 시설에 대한 감시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양육시설 1곳당 연간 최대 10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 내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

아동·심리·양육·복지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양육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시설 법인 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육시설 종사들의 의식 개선 필수=차영희(여·60·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전문가)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일부 종사자의 경우 학대와 훈육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시설 보호자들이 쌍꺼풀 수술과 화장 등을 하고 싶어하는 요즘 어린이의 심리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 전문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양육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 중 상당수는 조사기간 수개월 동안 아이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서 "일부에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를 다른 보호소로 옮겨 보호하는 사례도 있다.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시설에서 분리하는 등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진 아웃제 도입돼야=이용교(58)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학대 논란을 겪고 있는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은 최근 10여년간 아동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과 직원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3차례나 적발 됐는데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비리와 학대 등이 3차례 적발시 최대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삼진 아웃제' 등 강도높은 징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중요=양정숙(여·60)광주YWCA솔빛타운시설 소장은 "가족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은 돌봐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아기부터 학대를 당해온 탓에 자신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인식했더라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참고 견디는 사례도 많다. 이들을 위한 정기 상담·심리교육은 물론 보호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또 "보호대상아동은 나쁜 이미지로 낙인 찍힌 채 사회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편견도 너무 크다"면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정서적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1대1 후견인제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바꿔야=강원도 영월에서 30여년 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정선(57)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해체, 유기 등 아픈 경험을 안고 있는 탓에 관리 위주의 대형 양육시설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대형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처럼 작은 규모로 전문화된 시설 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룹홈은 7명 이하의 아이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소규모로 구성돼 비용도 대형 양육시설보다 적게 들고,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되는 등 장점이 많다. 장기적으로 대형양육시설을 줄이고, 그룹홈 등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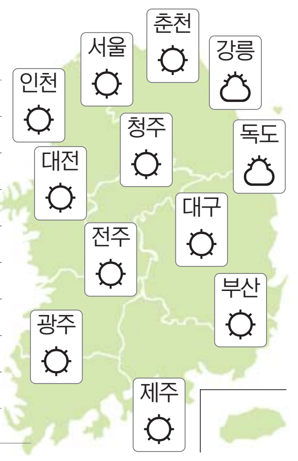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6:57	달뜸	04:01
해짐	17:35	달짐	16:27

안개 조심하세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

광주	맑음	6/20	보성	맑음	0/19
목포	맑음	8/19	순천	맑음	6/20
여수	맑음	10/19	영광	맑음	4/18
나주	맑음	2/20	진도	맑음	3/19
완도	맑음	8/20	전주	맑음	5/18
구례	맑음	1/20	군산	맑음	6/18
강진	맑음	3/20	남원	맑음	3/20
해남	맑음	1/19	흑산도	맑음	12/18
장성	맑음	3/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27	12:28
	17:48	--:--
여수	01:06	07:29
	13:24	19:40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높음
미세먼지	나쁨

◇주간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7/20	10/18	11/17	12/16	8/18	8/18	7/18

광주지법 미쓰비시 3차 소송 내달 14일 선고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 항소심을 다음달 14일 선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영옥(86)할머니와 1944년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고 최정례(사망 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2015년 5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재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할머니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6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미쓰비시측은 같은달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앞당겼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소송의 항소심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안으로 보고 다음달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기된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경찰 "국회·정당 정보관 출입 폐지…안보수사 '내사 일몰제' 도입" 경찰청 국정감사

경찰청이 경찰 정보관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보 경찰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민 청장은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정보관실 분실을 청사 내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세계요리대회 2018 광주세계요리대회가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양심·종교 이어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나올까

대법 입영거부 20대 사건 심리
양심·종교 무죄에 결론 촉각

대법원이 종교와는 다른 일반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앞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22)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K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K씨는 병역거부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는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특히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씨의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K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K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면서 위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두고 제시한 새 판단기준에 따르면 K씨의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K씨도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새 판단기준은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K씨 역시 새 판단기준에 본인의 사정이 부합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